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근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종전과 경기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장기적 전망과 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 현황은 이들 국가가 중기적으로 더 많은 국방비를 투여할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무기 대외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공격 능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꾸준히 전략 작전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공격현실주의, 방어현실주의 등 현실주의이론의 관점에서의 진단은 부정적이다. 아울러 전쟁단계모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각국이 역지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실정치(realpolitik)의 전략만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수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3.19) 발표자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각국의 동향
 - 가. 최근 동아시아 국방비의 추이
 - 나. 최근 동아시아 무기 수출입 동향
 - 다. 병력 및 주요 무기체계 현황
3.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가. 세력균형이론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 나. 세력전이이론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
 - 다. 공격현실주의와 방어현실주의, 억지와 군비경쟁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 이 글은 최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이 한반도 평화에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
- 군사력 균형에 대한 엄밀한 객관적 판단은 불가능할 수 있음
 -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또한 군사력 균형에 대한 평가에는 편견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활용되는 계량적 지표 중 하나인 국방비 추이와 GDP 대비 국방비 비교, 무기체계의 변화 추이 등을 통해 군사력 균형의 대략적인 평가를 시도함

2.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각국의 동향

가. 최근 동아시아 국방비의 추이

- SIPRI 2014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국방비는 2012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1.8% 증가하였음²⁾
 - <표 1>에서처럼,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의 10년간 미국의 국방비는 12% 증가, 한국의 국방비는 42% 증가, 일본의 국방비는 0.2%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음.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동 기간에 국방비를 두 배(중국 170%, 러시아 108%) 이상 증가시켰음
 - 중국 국방비 증가는 2013년에 7.4%였고 이는 최근 4년간 국방비 성장률이 10%를 하회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최근 중국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의 갈등 국면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지만 안정적인 국방비 증가율은 중국이 장기적인 계획의 관리하에서 경제 성장이 제공하는 여력의 범위 내에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의미³⁾
 - 그 하나의 증거로 중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04년(2.1%)과 2013년(2.0%)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2013년에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비중(미국 3.8%, 러시아 4.1%, 한국 2.8%)에도 미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추정치이긴 하지만 2013년에 중국 국방비(\$188b)가 러시아 국방비(\$88b)의 2배가 넘음

〈표 1〉 2013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Rank		Country	Spending, 2013 (\$ b.)	Change, 2004-13 (%)	Spending as a share of GDP (%) ^a	
2013	2012				2013	2004
1	1	USA	640	12	3.8	3.9
2	2	China	[188]	170	[2.0]	[2.1]
3	3	Russia	[87.8]	108	[4.1]	[3.5]
4	7	Saudi Arabia	67.0	118	9.3	8.1
5	4	France	61.2	-6.4	2.2	2.6
6	6	UK	57.9	-2.5	2.3	2.4
7	9	Germany	48.8	3.8	1.4	1.4
8	5	Japan	48.6	-0.2	1.0	1.0
9	8	India	47.4	45	2.5	2.8
10	12	South Korea	33.9	42	2.8	2.5
11	11	Italy	32.7	-26	1.6	2.0
12	10	Brazil	31.5	48	1.4	1.5
13	13	Australia	24.0	19	1.6	1.8
14	16	Turkey	19.1	13	2.3	2.8
15	15	UAE ^b	[19.0]	85	4.7	4.7
Total top 15			1 408			
World total			1 747	26	2.4	2.4

[] = SIPRI estimate.

출처: Perlo-Freeman and Solmirano(2014a), p.2

- 러시아 국방비는 2013년에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음.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국방비의 증가는 러시아가 ‘국가재무장계획(State Armaments Plan for 2011-20)’을 이행하면서 이뤄지는 상황임.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동 기간에 신형 또는 개선된 무기체계에 총 \$705b를 투자할 예정이고, 계획 종료시 약 70%의 무기체계가 현대화됨⁴⁾
- 일본 국방비는 최근 10년 이상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비공식적 제한선인 GDP 1% 규모를 유지하여 왔음.⁵⁾ 그러나 북한 및 한반도 상황과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고려로 일본의 국방비는 근래에 최초로 2013년에 0.8% 증가하였고, 2014년에도 2.8%의 증가를 예고한 바 있음⁶⁾

나. 최근 동아시아 무기 수출입 동향

- SIPRI 보고서에 의하면 <표 2>에서처럼 최근 5년간(2009~13년)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래된 무기의 56%를 수출하였음.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하여, 총 47%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였음. 한국은 이 기간에 미국 무기를 두 번째로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의 10년간
미국의 국방비는
12% 증가,
한국의 국방비는
42% 증가,
일본의 국방비는
0.2%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음.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동 기간에 국방비를
두 배(중국 170%,
러시아 108%)
이상 증가시켰음*

중국의

무기 수출량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전 세계

거래량의 6%로

그리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그 증가세는

212%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증가세는

중국이 군사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임

- 많이 구매한 국가임
- 동 기간에 미국 무기 수출량의 61%가 전투기를 포함한 비행기였고, 향후에도 F-35 최신예 전투기가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수출될 예정임
- 러시아는 동 기간에 무기 수출량을 28% 증가시켰는데, 러시아 무기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3개국에 집중되었음
- 중국의 무기 수출량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전 세계 거래량의 6%로 그리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그 증가세는 212%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증가세는 중국이 군사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임⁷⁾

〈표 2〉 무기 수출량 상위 10개국과 주요 구매국(2009~13년)

Exporter	Share of international arms exports (%)		Main clients (share of exporter's total exports), 2009-13		
	2009-13	2004-2008	1st	2nd	3rd
USA	29	30	Australia (10%)	South Korea (10%)	UAE (9%)
Russia	27	24	India (38%)	China (12%)	Algeria (11%)
Germany	7	10	USA (10%)	Greece (8%)	Israel (8%)
China	6	2	Pakistan (47%)	Bangladesh (13%)	Myanmar (12%)
France	5	9	China (13%)	Morocco (11%)	Singapore (10%)
UK	4	4	Saudi Arabia (42%)	USA (18%)	India (11%)
Spain	3	2	Norway (21%)	Australia (12%)	Venezuela (8%)
Ukraine	3	2	China (21%)	Pakistan (8%)	Russia (7%)
Italy	3	2	India (10%)	UAE (9%)	USA (8%)
Israel	2	2	India (33%)	Turkey (13%)	Colombia (9%)

출처: Wezeman and Wezeman(2014), p.2

〈표 3〉 무기 구매량 상위 10개국과 주요 수출국(2009~13년)

Importer	Share of international arms imports (%)		Main suppliers (share of importer's total imports), 2009-13		
	2009-13	2004-2008	1st	2nd	3rd
India	14	7	Russia (75%)	USA (7%)	Israel (6%)
China	5	11	Russia (64%)	France (15%)	Ukraine (11%)
Pakistan	5	2	China (54%)	USA (27%)	Sweden (6%)
UAE	4	6	USA (60%)	Russia (12%)	France (8%)
Saudi Arabia	4	2	UK (44%)	USA (29%)	France (6%)
USA	4	3	UK (19%)	Germany (18%)	Canada (14%)
Australia	4	2	USA (76%)	Spain (10%)	France (7%)
South Korea	4	6	USA (80%)	Germany (13%)	France (3%)
Singapore	3	2	USA (57%)	France (16%)	Germany (11%)
Algeria	3	2	Russia (91%)	France (3%)	UK (2%)

출처: Wezeman and Wezeman(2014), p.4

- SIPRI 자료에 따르면, <표 3>에서처럼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 10개국 순위에 중국, 한국이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은 2004~08년 사이 세계 무기 수입량의 11%를 차지하였으나, 2009~13년 사이에 그 비중은 5%로 줄었음. 이는 중국의 군사기술이 진전되어 핵심무기의 자체조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임. 그런 가운데 중국 무기 구매량의 64%가 러시아로부터 온다는 것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것임

다. 병력 및 주요 무기체계 현황

- 2013년 동아시아 주요국의 병력 현황은 아래의 <표 4>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각국의 군사력을 전체 병력의 규모로 단순히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영토의 점령이나 침입한 적군을 격퇴시키는 데에 지상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들어 해군력과 공군력이 전쟁의 향방 또는 전략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억지 및 강제의 측면에서는 해군력 또는 공군력이 지상군보다 유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능력은 군사력의 해외 투사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적 능력은 단순 병력의 비교보다는 해당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비교를 통해 가능할 것임

<표 4> 동아시아 주요국 병력 현황(2013년)

단위: 명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계	1,492,200	247,150	2,333,000	845,000
육군	586,700	151,050	1,600,000	250,000
해군	327,700	45,500	235,000	130,000
공군	337,250	47,100	398,000	150,000
기타	해병대 199,350 해안경비대 41,200	통막 3,500	제2보병 100,000	공수 35,000 전략 80,000 지휘/지원 200,000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2015), 부록 p.236

- <표 5>에서처럼 2013년 현재 해군의 전략적 무기의 수준을 평가한다면, 그 능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의 순으로 볼 수 있는데, 러시아의 능력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능력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는 순양함, 구축함, 원자력잠수함 등의 기능과 무장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해군력의 측면에서 압도적인 전력 투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는 데 주요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임

억지 및 강제의 측면에서는 해군력 또는 공군력이 지상군보다 유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능력은 군사력의 해외 투사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적 능력은 단순 병력의 비교보다는 해당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비교를 통해 가능할 것임

〈표 5〉 동아시아 주요국 해군력 현황(2013년)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잠수함(척)	58	18	66	53
전략핵잠수함(척)	14	-	4	11
항공모함(척)	10	-	1	1
순양함(척)	22	-	-	5
구축함(척)	62	36	15	18
호위함(척)	13	11	54	9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55	6	216	82
소해함(척)	13	30	53	53
상륙함(척)	30	4	85	20
상륙정(척)	245	20	152	19
지원함(척)	71	80	212	636
전투기(대)	823	-	264	41
헬기(대)	670	134	103	212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5), 부록 p.237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성능에서는 숫자만큼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전략적 능력의 구현에 필수적인 급유기와 조기경보기의 숫자에서 중국은 미국과 아직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상황은 공군력의 측면에서도 유사하여,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숫자는 비슷하지만, 중국은 실질적으로 전략폭격기를 실전배치하지는 못한 상태임
-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성능에서는 숫자만큼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전략적 능력의 구현에 필수적인 급유기와 조기경보기의 숫자에서 중국은 미국과 아직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 6〉 동아시아 주요국 공군력 현황(2013년)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략폭격기(대)	143	-	-	141
폭격기(대)	-	-	90	-
정찰기(대)	350	17	55	114
지휘기(대)	4	-	5	6
전투기(대)	1,258	340	1,505	1,138
수송기(대)	431	65	327	390
급유기(대)	226	5	10	20
조기경보기(대)	33	17	8	23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2015), 부록 p.237

-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은 무기체계의 양적인 평가 외에도 그 변화 및 향후 추이에 대한 전망임
- 미국은 최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미국 지상군 병력은 2018년까지 570,000명에서 490,0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고, 해병대 병력은 20,000명이 줄어든 182,000명 수준으로 감축될 것임. 해군의 경우, 2척의 상륙선과 7척의 타이콘데라급 순양함을 조만간 퇴역시킬 예정이고, 신형 함선 건설 계획의 연기가 예정되어 있음. 특히 2번째 포드급 항공모함과 오하이오급 원자력핵잠수함 등의 건조가

이년 이상 지체될 것으로 보임. 공군의 경우에도, F-35의 설계상 결함 때문에 그 구매량과 인도 시기가 축소되고 지연될 예정임⁸⁾

- 이런 군사력 조정을 군사력의 축소로 평가하기는 힘들. 재균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공군력의 신장에 주력하고 있음. 미국 공군은 전폭기, 스텔스 기능, 정찰감시 능력, 그리고 신형 폭격기의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고, 해군은 52척의 함정을 태평양사령부 관할에 배치하고, 이 숫자를 점증시킬 계획임. 육군과 해병대의 병력 숫자는 축소되지만 66,000명의 육군과 3,400명의 해병대 병력이 이 지역에 상주할 예정임⁹⁾
- 주목할 점은 미국은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현대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한 계획하에서 미국은 오래된 핵탄두의 수명을 연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12척의 새 원자력핵잠수함, 100기의 신형 폭격기, 400개의 지상발사미사일 등에 배치할 핵무기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음. 여기에는 향후 30년간 총 \$900b~\$1.1t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¹⁰⁾

○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행보도 주의를 요하는 상황임

- 중국의 경우 군사력 전개 능력을 최근 신장시키고 있음.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50,000톤급 랴오닝 항공모함의 취역 외에, 중국은 독자 개발한 항공모함의 취역을 추진하여 10년 내 항공모함을 수 척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진급(Jin-class) 원자력핵잠수함을 향후 8척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차세대 잠수함은 사정거리가 신장된 신형 JL-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예정임. 또한 공격 원자력잠수함(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도 확대하여 현재 두 척인 상급(Shang-class) 잠수함 전력을 총 6척 규모로 증가시킬 것임¹¹⁾
-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은 소위 반접근지역거부(A2AD)와 스텔스 능력의 신장과 아울러 정밀타격 능력과 방공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2018년 이후 실전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J-20은 기동성과 스텔스 능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폭격기의 기능도 신장시켜 신형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¹²⁾ J-20의 축소판으로 보이는 J-31은 중국이 개발한 두 번째 스텔스전투기로 함재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¹³⁾
- 러시아 역시 최근에 신형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 RS-24와 R-29RMU2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2020년까지 60기 규모의 5세대 T-50 스텔스전투기를 운영할 계획임¹⁴⁾
-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의 도입을 추진함. 방위계획대강을 보면 일본은 유사시 도서지역을 방어하거나

주목할 점은 미국은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현대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한 계획하에서 미국은 오래된 핵탄두의 수명을 연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12척의 새 원자력핵잠수함, 100기의 신형 폭격기, 400개의 지상발사미사일 등에 배치할 핵무기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음

**최근 동아시아의
안보 현실은 비록
전통적 영토 중심의
갈등은 아니지만
국가 간 (냉전적)
속적 관계의 잔존과
해양분쟁의 촉발
가능성,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지역체제적 균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필요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

탈환하는 데 필요한 틸트로터(tilt-rotor) 항공기와 수륙양용차, 그리고 감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인기와 정찰기의 능력을 보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¹⁵⁾ 물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두 척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임.¹⁶⁾ 일본은 이미 2014년 9월 말부터 소위 헬기항모인 이즈모를 운용하는 해상 운용시험에 돌입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조된 일본 군함 중 가장 큰 규모로 2015년 초에 취역하였음¹⁷⁾

3.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최근 국제정치 일반의 전개와 관련하여 현실주의이론은 과거의 적실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함¹⁸⁾
 - 비록 최근 동아시아의 안보 현실은 비록 전통적 영토 중심의 갈등은 아니지만 국가 간 (냉전적) 속적 관계의 잔존과 해양분쟁의 촉발 가능성,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지역체제적 균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필요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소극적 평화의 반대로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은 일찍이 전쟁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되어온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정치적 단위체들이 상당한 기간 높은 수준의 무력을 사용한 행위”라는 전쟁 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 논의하여 온 현실주의이론의 맥락에서 토론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¹⁹⁾

가. 세력균형이론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 세력균형이론에서는 국가는 영토보전과 주권유지로 상징되는 생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다른 목표들은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패권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파악함²⁰⁾
 -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군사력의 질적·양적인 증가는 이미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으로 표면화되고 있어서 중국의 확장되는 전략적 이익 개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회귀하는 미국과의 이해 충돌은 쉽사리 조정되기 힘든 문제 중 하나임²¹⁾
 - 이에 미국은 예정된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해군력의 감소는 최소화하겠다는 지침을 유지하면서 항공모함 11척 배치를 유지하고,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지역 내에서 기존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협력과는 별도로 광범위한 방식으로 동맹국과 지역 내 파트너들과의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동시에 동맹의 안보딜레마 이슈를 발생시켜 새로운 불안 요인을 조성하고 있음.²²⁾ 동맹의 안보딜레마는 동맹 형성 이후에는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약(commitment) 정도와 지원 이행 수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생겨, 동맹에 얼마나 충실할 것인가라는 결정의 결과가 딜레마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임
- 미국은 지역 내의 여러 국가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여 유지해왔고, 이들 조약 내용 중 조약 당사자가 결부된 분쟁 발생시 미국의 의무적인 개입을 언급한 조항이 있음. 동맹조약 때문에 이들 국가가 중국 등 제3자와 영토적 분쟁에 결부된다면 미국으로서도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지역 내의 평화 유지가 역내 동맹국들과의 동맹조약과 병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세력균형론의 입장에서 미국은 당분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동맹의 딜레마 문제는 여전히 부차적이지만 촉발적인 갈등의 단초로 남아있게 될 것임
- 동시에 중국 또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부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중국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보이듯이 미국의 행동이 양국에 동시에 압박으로 인식된다면 군사적 협력의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양국은 이미 2005년부터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정기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고 2013년에 전 세계 무기 수출량의 27%를 차지한 러시아 무기를 2번째(12%)로 많이 구매한 국가가 중국임.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5년간 중국의 해외 무기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이 64%를 차지하였고, 2012년에 취역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라오닝호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재장비된 것임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관찰됨. 2014년 5월 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은 20년간의 장기 협상 끝에 30년 간 4,000억 달러의 가스 사용에 관한 조치에 서명하였음. 또한 양국 해군은 동중국해 일원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음.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노력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BRICS 개발은행과 천 억 달러 규모의 적립기금 창설을 주도하였음²³⁾
- 다만 세력균형론의 입장에서도 동아시아 군사질서 즉 중장기적인 안정과 평화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론적 분파에 따라 다른 전망이 가능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세력전이론의 관점에 대한 논의 이후에 다시 설명함

**세력균형론의 입장에서
미국은 당분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동맹의 딜레마 문제는
여전히 부차적이지만
촉발적인 갈등의
단초로 남아있게
될 것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익의 충돌 가능성,
즉 중국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존재함.
미국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동중국해 해역
준비태세 강화를
포기할 수 없다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미국 해군의 활동에
대해 중국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임**

나. 세력전이이론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

- 세력균형이론이 균형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세력전이이론은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초점을 둔 논의가 가능함²⁴⁾
 - 세력전이론적 주장은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에 대해 경고함
 - 세력전이론에 따르면 체제 내에서 부상하는 국가가 기존 질서에 불만족하고 선두 주자의 국력에 근접하면서 이를 추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짐²⁵⁾
 -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 간 전체적인 국력의 격차는 중국이 최근 20여 년간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유지함에 따라 급속도로 축소되었고 2020~30년대의 어느 시점, 경제력의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음
 -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군사력이 지역 내에서는 미국에 필적할 수준을 구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특히 중국은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력투사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관건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현존 질서를 중국이 감내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인데,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미국은 중국이 대만 등의 핵심이익과 관련한 불만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²⁶⁾
- 한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익의 충돌 가능성, 즉 중국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존재함. 미국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동중국해 해역 내 준비태세 강화를 포기할 수 없다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미국 해군의 활동에 대해 중국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임
- 또한 2014년 웨스트포인트에서의 졸업식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동맹국들의 방어를 미국의 ‘핵심적 이익(core interest)’에 포함시키면서 미국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임을 강조했음. 그러한 경우란 미국민이 위협받고, 미국의 삶이 위협에 처하고,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협에 처하는 경우라고 부연하였음. 미국 본토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재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협에 처하는 경우란 한반도와 동·남중국해에 해당되고,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에는 상당한 갈등적 상황이 전망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세력전이론의 가장 비판적 전망 중의 하나가 부상국 또는 기존 강대국이 예방전쟁의 유인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상황 전개와 관련하여 세력전이론이 가지는 함의는 실질적임

- 체제 수준에서의 세력전이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고, 언제 누가 전쟁을 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력전이론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지만, 상식적으로 세력전이론에서 주목하는 갈등 전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불안정성의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음²⁷⁾

다. 공격현실주의와 방어현실주의, 억지와 군비경쟁

- 신현실주의이론의 한 분파인 공격현실주의이론은 국가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함
- 국가는 가능할 때(더 많은 권력을 추구할 기회가 있고, 그 권력을 추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권력이 제공하는 이득이 더 클 때)는 항상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임.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국제 무정부 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국가의 행동준칙임
- 이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동아시아의 경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으로 비록 지역적인 세력전이가 관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전략적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함.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 능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타국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의 군사력 강화도 공격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중국의 핵심이익이 확장된 상황에서 중국은 그러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용보다는 이익을 수호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을 위한 능력도 경제적·기술적으로 과거보다는 대폭 신장된 상황임
- 미어샤이머의 주장처럼 평화적인 중국의 부상은 불가능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임. 현재 중국의 모습은 미국이 서반구의 지역패권국으로 부상할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중국은 그러한 부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물론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장악한다면 그 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양국 또는 세력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예견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미어샤이머의 견해임²⁸⁾
-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충돌을 방지할 가능성을

비록 지역적인 세력전이가 관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전략적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함.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 능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타국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볼 수 있음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쟁하는 국가들이
권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안보만을
추구한다는 선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군사전략과
준비태세를
유지한다면
소위 작용-반작용의
과정을 거쳐
나선형으로 고조되는
군비경쟁과 국가 간
안보딜레마의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

찾을 수 있음. 방어현실주의의 관점에서는 모든 국가가 권력의 상대적 확장보다는 안보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원하지 않은 전쟁과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함.²⁹⁾ 물리적 군사력 그 자체보다 군사력으로부터 파생되어 인식되는 위협의 정도에 집중하는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는 잠재적 적국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군사력 그 자체가 야기하는 위협은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함. 현 상황이 방어가 공격보다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격을 유리하게 만드는 무기체계들조차도 정복을 용이하게 하여 선제행동의 이득을 강화하는 측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공격 우위의 장점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음³⁰⁾

- 따라서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쟁하는 국가들이 권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안보만을 추구한다는 선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군사전략과 준비태세를 유지한다면, 소위 작용-반작용의 과정을 거쳐 나선형으로 고조되는 군비경쟁과 국가 간 안보딜레마의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³¹⁾
- 반면, 앞에서 검토한 미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모습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전략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수단들을 차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 현재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거부적 억지와 징벌적 억지 양 차원의 군사적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집합적으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함
- 따라서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은 당분간 억지보다는 군비경쟁의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각국이 전략적 환경에 대한 평가와 군사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기의 선택적 도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체제적 수준에서 이러한 추이를 변화시킬만한 요인을 찾기 힘들 가능성이 높음

4. 나오는 말

- 동아시아 각국이 억지 또는 균형의 차원에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군사력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현 상황은 방어현실주의의 낙관적 전망을 약화시키고, 또한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차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역내의 불안정 요인을 증가시키고 있음
-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전의 비극적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과 현 상황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음: 잠재적

경쟁자의 급부상, 총력전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호의존의 심화, 영토적 문제와 관련된 민족주의의 고양, 사전적 준비태세의 일환으로 주적에 최적화된 군사작전 개념의 수립, 동맹의 결속력 심화, 권력과 위신을 신속히 신장시키려는 기습적 조치의 유혹 등³²⁾

- 양 시기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여,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으로 분리되어 있고, 양국의 정치적 이념과 제도가 상이하며, 군사력의 차이도 존재함. 또한, 미국 경제가 자원과 시장의 측면에서 중국에 보다 의존하는 양태이고, 지금은 핵무기가 포함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당장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전면적 형태로 촉발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평가하기는 힘들
- 한편, 인류의 역사에서 있어서 전쟁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고, 그 수행에 결부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각국의 군사적 고려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
- 특히 전쟁은 경쟁하는 둘 이상 국가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각국의 행동에 다른 수준의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쟁의 준비를 의미하는 군사력의 건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³³⁾ 그런 관점에서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논하기 위해서 전쟁원인론 중에 전쟁단계모델의 함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쟁단계모델(The Steps to War Model)은 영토분쟁의 유무, 분쟁관계 국가의 동맹 유무, 분쟁의 재발 여부, 상호 간 군비경쟁 여부 등 네 가지 변수가 해당 국가들 사이 전쟁 가능성에 단계적으로 결합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³⁴⁾
- 이 모델의 함의는 소위 ‘현실주의적 처방(realpolitik strategies)’의 비생산적 결과에 대한 경고에 있음. 강압적 위협, 군사력 증강, 동맹 등은 일반적으로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현실주의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이 모델에서는 그런 수단들이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됨.
- 모든 영토분쟁이 전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쟁으로 귀결되는 모든 영토분쟁에서 해당 국가들이 상기 현실주의적 대응을 했음이 관찰된다는 것임.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이런 관계를 “전쟁으로 가는 현실주의적 경로(realist road to war)”라고 명명함³⁵⁾
- 결국 영토적 분쟁과 경쟁관계, 현실주의적 처방이 서로 상승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현실주의적 전략문화의 재생산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쟁 회피적인 정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함의임. 이 모델을 따른다면 현재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적수적 관계의 심화는 일종의 전쟁단계를 답습하는 상황이고, 세력균형과 세력전이라는

**전쟁은 경쟁하는
둘 이상 국가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각국의 행동에
다른 수준의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쟁의 준비를
의미하는 군사력의
건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그런 관점에서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논하기 위해서
전쟁원인론 중에
전쟁단계모델의
함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다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 역시 그러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급속한 세력전이 또는 안정적인 세력균형이 형성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은 조금씩 잠식될 가능성이 큼. 결국 관련 국가들이 포괄 및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해내고 경제적·기타 상호의존의 심화를 통해 상호 간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반도 평화의 전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으로서는 지역 내에서 강대국 간의 전략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간 및 다자 또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러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인식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특히 각국 입장의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불안정 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교류가 필요함

주석

- 1) 군사력 균형의 유효한 평가의 방식에 대해서는 단일한 합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주관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방비를 중심으로 전쟁 수행 잠재능력과 무기체계의 변화를 표면적으로 관찰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힘. 또한 평화는 동아시아 관련국들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는 일종의 소극적 평화의 제한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것임을 아울러 밝힘.
- 2) Sam Perlo-Freeman and Carina Solmirano, "SIPRI Fact Sheet: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3"(April 2014a), p.1.
- 3) Perlo-Freeman and Solmirano(2014a), p.2.
- 4) Perlo-Freeman and Solmirano(2014a), p.2.
- 5) 이런 제한은 제도적인 구속에 따라 생긴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임. 1987년의 이례적인 편성과 후쿠시마 사태 이후 2011년에 추가예산 때문에 1% 국방비 규모를 초과한 적은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6) Sam Perlo-Freeman and Carina Solmirano, "Military Spending and Regional Security in the Asia-Pacific," *SIPRI YEARBOOK 2014: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14b), p.192.
- 7) Siemon T. Wezeman and Pieter D. Wezeman, "SIPRI Fact Sheet: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3"(March 2014), pp.2-3.
- 8)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p.50.

- 9)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Overview—FY2014 Defense Budget Summary*,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13. http://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14/FY2014_Budget_Request_Overview_Book.pdf.
- 10) “U.S. Ramping Up Major Renewal in Nuclear Arms,” *New York Times* (September 21, 2014).
- 11)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3), p.6.
- 12) Department of Defense(2013), p.35.
- 13) John Reed, “China’s Second Stealth Jet May be a Carrier Fighter,” *Foreign Policy—Situation Report* (March 11, 2013).
- 14) IISS(2013), pp.207-208.
- 15) Japanese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4 and Beyond”(Dec. 17, 2013).
- 16) Perlo-Freeman and Solmirano(2014b), p.193.
- 17) “일본, 헬기함모 ‘이즈모’ 해상 시험 돌입: 내년 초 취역,” 『세계일보』, 2014년 10월 2일.
- 18) 이러한 주장은 고봉준, “동아시아 망제정치: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 네트워크 전략,” 『평화학연구』 제14집 3호(2013a) 참조.
- 19) 이러한 정의는 우리 군에서 전쟁을 정의할 때 사용하고 있음.
- 20)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토론은 대표적으로 Kenneth N. Waltz,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1(Summer 2000), pp.5-41 참조.
- 21) 고봉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미국: 재균형, 복합, 네트워크 정치,” 『민족연구』 53권(2013b), pp.89-90.
- 22) 동맹의 안보딜레마 개념에 대해서는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36, No.4(1984), pp.461-495 참조.
- 23) Yu Bin, “China-Russia Relations: Navigating through the Ukraine Storm,” *Comparative Connections* (September 2014), p.1.
- 24) 세력전이론에 대한 개략적 이해는 Jacek Kugler and Douglas Lemke,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Assess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s,” in Manus I. Midlarsky (ed.), *The Handbook of War Studies II*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p.129-63 참조.
- 25) Jack S. Levy and William R. Thompson, *Causes of War* (Chichester, UK: Wiley-Blackwell, 2010), p.44.
- 26) 이러한 대표적인 견해로는 Steve Chan, *China, the U.S. and the Power-Transition Theory: A Critique* (New York: Routledge, 2008) 참조.
- 27) 제1차 세계대전 전 독일이 러시아의 성장에 자극받아 전쟁이 발발했다는 주장. 이스라엘의 1981년 오시라크 공격,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공격 등과 관련된 주

장이 이러한 전망과 궤를 같이 함.

- 28)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John J. Mearsheimer,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3, No.4(2010) 및 “Can China Rise Peacefully?”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25, 2014).
- 29) 대표적인 방어현실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30, No.2(January 1978) 참조.
- 30) 공수 우위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군사력을 지녔을 때 공격과 방어 중 어느 쪽이 우위를 지니는지와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양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음. 이 중 전자는 단기적 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 후자는 군비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됨. 즉, 저비스는 방어가 우세하면 특정 수준의 군사력으로 수렴되어 지나친 군비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함.
- 31) 물론 방어현실주의에서 안보 추구 국가들 간의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님. 국내정치적 요인 또는 극단적인 오인에 의하여 안보 추구 국가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방어현실주의자들은 설명함.
- 32) Graham Allison, “Dont’ Worry, the Next World War is not upon Us...Yet,” *Defense One* (July 31, 2014).
- 33) 물론 전술한 억지모델의 측면에서는 군사력의 건설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함.
- 34) Paul D. Senese and John A. Vasquez, “Assessing the Steps to Wa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5, Issue 4(October 2005), pp.607-633.
- 35) Levy and Thompson(2010), p.61.

참고문헌

고봉준. “동아시아 망제정치: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 네트워크 전략.” 『평화학연구』 제14집 3호(2013a).

_____.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미국: 재균형, 복합, 네트워크 정치.” 『민족연구』 53권(2013b).

Bin, Yu. “China-Russia Relations: Navigating through the Ukraine Storm.” *Comparative Connections* (September 2014).

Chan, Steve. *China, the U.S. and the Power-Transition Theory: A Critique* (New York: Routledge, 2008).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Department

- of Defense, 2013).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 Japanese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4 and Beyond”(Dec. 17, 2013).
-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30, No.2(January 1978).
- Kugler, Jacek and Douglas Lemke.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Assess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s.” in Manus I. Midlarsky (ed.). *The Handbook of War Studies II*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Levy, Jack S. and William R. Thompson. *Causes of War* (Chichester, UK: Wiley-Blackwell, 2010).
- Mearsheimer, John J.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3, No.4(2010).
- _____. “Can China Rise Peacefully?”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25, 2014).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Overview—FY2014 Defense Budget Summary,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13. http://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14/FY2014_Budget_Request_Overview_Book.pdf.
- Perlo-Freeman, Sam and Carina Solmirano. “SIPRI Fact Sheet: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3”(April 2014a).
- _____. “Military Spending and Regional Security in the Asia-Pacific.” *SIPRI YEARBOOK 2014: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14b).
- Reed, John. “China’s Second Stealth Jet May be a Carrier Fighter.” *Foreign Policy—Situation Report* (March 11, 2013).
- Senese, Paul D. and John A. Vasquez. “Assessing the Steps to Wa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5, Issue 4(October 2005).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 *World Politics*, Vol.36, No.4(1984).
- Waltz, Kenneth N.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1(Summer 2000).
- Wezeman, Siemon T. and Pieter D. Wezeman. “SIPRI Fact Sheet: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3”(March 2014).
- “일본, 헬기항모 ‘이즈모’ 해상 시험 돌입: 내년 초 취역.” 『세계일보』(2014년 10월 2일).
- Allison, Graham. “Dont’ Worry, the Next World War is not upon Us…Yet.” *Defense One*(July 31, 2014).
- “U.S. Ramping Up Major Renewal in Nuclear Arms.” *New York Times* (September 21, 2014).

❖ 저자 약력

■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겸 평화안보대학원 군사학과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평화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함.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 비확산, 군사전략, 미국외교안보정책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핵비확산과 네트워크 세계정치”,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미국”, “동아시아 망제정치: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 네트워크 전략”, “핵전략” 등이 있음. bjko@cnu.ac.kr

기획 및 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